

“도, 전국 최초 제정 조례에 무성의”

이명연 도의원,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홍보 약속도 지키지 않아
5분 발언에 대한 실질적 정책 이행·후속조치 없음에도 ‘완료’로 보고”

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열심완화, 미세먼지 흡착, 우수 저장 및 정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녹색도시 구현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인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례를 이행하기보다는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대응만 반복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자신이 2023년 5월 대지의 조경 관련 5분 발언을 한 지는 2년이 되었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지는 1년 4개월가량 지났지만, 전북자치도는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례를 이행하기보다는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대응만 반복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자신이 2023년 5월 대지의 조경 관련 5분 발언을 한 후, “전북자치도는 6월 중에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 유지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지만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2024년 5월 완료된 전북연구원의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 역시 공수표가 되었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전북자치도의회에 보고한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북자치도가 2024년 1월과 7월에 도의회에 송부한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를 보면, 1월에는 추진 중, 7월에는 완료로 명시해 놓았는데, 조치 내용 중 1월과 비교해 7월에 달라진



임상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정질문을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달라진 게 전혀 없음에도 조치결과를 ‘완료’라고 적어 놓은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

위에 5월 12일 자료요구를 한다고 하자 전북자치도는 다음 날인 13일에서야 도내 14개 시군에 건축물 유지·관리 예방 안내문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늦장 행정으로 일관했는데, 이는 전북자치도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을 받게 충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연구원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조경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행

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의원이 질타한 5분 발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책 이행이나 후속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조치결과를 ‘완료’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었다”면서 “향후에는 조치결과 판단 시 형식적인 요건이 아닌, 이행의 실제 수준과 정책 후속 조치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대지의 조경 관련 조례가 “기후위기 대응, 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장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 실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새 보금자리 제공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새 보금자리 제공

육군 제35보병사단은 12일 나라사랑 보금자리 419호 준공식을 연 가운데, 익산시 함열읍에 거주하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임길준(80)씨에게 주택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수도사단(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으로 1968년부터 약 1년간 베트남에 파병돼 임무를 수행한 후 병장으로 전역했다.

“전북도정, 허구적 성과 과대 포장... 소극행정 일관”

염영선 도의원, 민선8기 낮은 기업유치 이행률·청년정책 미온적 대응 등 질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은(정읍2)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정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개선을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정은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허구적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유치 실적을 홍보한 것과 관련하여 “2024년 6월 27일 발표된 12조8,000억원 유치 성과는 1년이



에도 일정 성과를 낸 민선 7기보다도 오히려 뒤처진 결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염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민선 8기 들어 단 한 건의 산업단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 유치의 기반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기

다 된 자금 실질적인 투자 이행률이 8.54%, 일자리 창출률이 3.98%에 그치는 등 실제 성과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이는 코로나 시기

업 유치가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과 전략적인 기업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여성, 노인,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가 있는 반면, 청년 일자리를 전담하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년 일자리를 의미하는 인구청년정책과의 소극적 태도는 무관심에서 비롯된 행정적 무책임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전담 부서 지정과 예산 기반의 청년 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학교 내 주차시설 난립과

학교 앞 불법 주차장 문제에 대해 염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내 주차시설 제한, 학교 앞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안전 시설물 확대 등을 통해 교육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영선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정책, 균형발전 등을 위한 기반 마련, 그리고 청년과 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의 전환을 촉구한다”며,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초교시절의 추억, 모두의 권리”

강동화 도의원, 초교 졸업생 졸업앨범비 지원 협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보건복지부와



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초등학교 전체 졸업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모든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소중한 졸업의 순간을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9월과 12월에 보건복지부에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실행을 협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재협의(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강동화 의원은 2023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

2024년 3월 전북교육청과 보건복지부가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을 취약계층으로 하는 협의를 완료하여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9월 모든 초등학생으로 변경 협의했고, 마침내 지난날 26일 전북교육청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 초등학교 전체 졸업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데 협의완 료했다. 이러한 결실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넘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자인 것이다.

이번 지원은 2025년 졸업예정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 초등학교의 모든 졸업생에게 앨범비 지원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강동화 의원은 “졸업앨범은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우정, 그리고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경제적 이유로 그 소중한 추억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책무”라고 하여 ‘졸업앨범비를 모든 초등학생 졸업생에게 지원’이라는 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환영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이 12일 국제라이온스협회로부터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도민들을 위한 공감행정 펼쳐 나갈 것”

문승우 도의회 의장, 국제라이온스협회 감사장 수상발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이 12일 국제라이온스협회로부터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이날 오전 9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수여식에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 정성길 이사장이 참석해 파브리시오 올리베이라 국제회장을 대신하여 감사장을 수여했다.

파브리시오 올리베이라 국제회장은

“문승우 의장은 전북 의정을 총괄하는 의장으로서, 활발한 대민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감사장 수여 배경을 밝혔다.

문승우 도의장은 “감사장에 수상에 의정활동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국가유산산업 육성·지원 활성화

민주 김운덕 의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의원(전주갑, 사무총장)은 12일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마련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세계국가유산산업전과 같은 대형전시가 열릴 정도로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계 및 지자체에서도 국가유산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유산산업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필라비스가 제작한 게임인 ‘검은사막’의 ‘아침의 나라: 서울’에 경복궁이 구현될 수 있도록 경복궁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도 국가유산산업의 일환이다.

또한 산불과 지진 같은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유산의 원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존하려는 것도 무



엇보다 중요한 국가유산산업이다.

이러한 국가유산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돼 2024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면서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이 신설됐다.

그러나 영화나 만화, 음악 등 다른 문화산업들이 각각의 개별근거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국가유산산업은 개별근거법도 없을뿐더러 작년 12월 전까지 산업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할 특수분류 체계도 없었다.

김운덕 의원은 “올해 3월 화미가 국가유산들을 집어삼켜 대한민국 중요한 자산들이 소실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유산들에 대한 원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술개발·활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국가유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근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권희정 기자

“완주전주 일방 통합, 또다른 분열 낳아”

윤수봉 도의원, 도정 질문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12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추진 중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먼저 세 차례 관 주도 통합 시도로 인해 입은 완주군민의 대립과 반목, 상처들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과 사과 의사를 물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임의적이고 한시적인 재정지원이 장기적으로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 관련 재정특례에 대해 조목조목 묻고 반박했다. 또한 전주시의 지방재정 악화와 관련해 동영상을 통한 질문을 했고, “전주시는 6천억 원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악화라는 참체적 상황을 완주·전주 통합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통합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의구심



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모 여론기관의 여론조사가 전북자치도의 의뢰로 제공된 것과 그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해 질문하고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도정질문에서 △통합과 2036 하계올림픽 유치의 상관관계 부존재 △청주·청원 통합 사례가 완주·전주 통합의 롤모델로서의 부적절성 △수도권 규제 강화와 지방분권의 실효적 정책 도모 촉구 △완주·전주 통합 후 특례시 지정의 부당성 △통합추진단 체 음식물 제공 후 유인물 살포행위의 불법성 △전북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질문했고, 완주·전주 통합의 전반적인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이만호 기자

바이오진흥원 민원 대응문제 심각성 제기

김이재 도의원, 도정 질문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바이오허용산업진흥원의 민원 대응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도내 농생명 및 식품 산업 지원의 핵심 기관임을 강조하며, 최근 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 기업이 디자인 제작 업체와의 갈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했다. 갈등 과정에서 해당 기업과 업체가 진흥원 담당자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이를 회피했고 결국 기업은 지원사업을 마치지 못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정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진흥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진흥원 내 담당자가 박람회 부스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입금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지역 기업들에 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진흥원에서 발생한 민원 사항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6개월 이상 경과된 자체 감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 감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만호 기자